

서부지방산림청, 드론 띄워 산림 불법행위 잡는다

산림청·전북경찰청 합동 드론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김 인천)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6일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 내 임산물 보호협약지역을 중심으로 송이·능이 등 가을철 주요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특히 드론과 산불제난특수진

화대 등 가용 인력·장비를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에 투입해 드론 예찰과 지상단속을 연계하고,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내 소각·취사·흡연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9월 14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훼손, 무단입산, 산림내 화기 취급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



▲합동 드론기동단속 실시

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인천 청장은 “드론과 현장 인력을 적극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자원

을 보호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북부지방산림청, 덩굴류 제거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가꾼다

10월 말까지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미래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도로변과 생활권 산림 경관을 가꾸기 위해 가을철 성장기를 맞아 10월 말까지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칩덩굴, 가시박 등 덩굴류가 조림지와 도로변, 생활권 산림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조림지의 어린나무를 휘감아 고사시키고 경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조림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력해 도로변과 생활권 산림 내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림 내 수목 피해

를 예방하고 가을철 산불 발생 원인을 줄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덩굴류,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집중 제거 기간 운영을 통해 미래 건강한 숲을 조성할 소중한 어린나무를 보호하겠다”라며 “국민이 자주 접하는 도로

변과 생활권 산림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산림청-충남,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 협력

피해목의 단계적 이용을 위한 현장 시연

산림청과 충청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화 방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림청과 충청남도는 5일 충남 태안군 산업화 방제 대상지에서 충남권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목의 단계적 이용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은식 산림청장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태안군수 등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합관·보도업계, 원목생산업체, 산림조합 등 산업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충남권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충남권 산업화 방제 체계 구축 ▲피해목의 단계적 이용 활성화 ▲피해목을 원목 형태로 이용하기 위한 방제 방식 확산 ▲충남도 공공건축의 목조건축 활성화 및 피해목 활용 ▲피해목 이동 과정의 예찰·모니터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화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방제처 뒤 방제처리하고, 제재목·보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우선 활용한 뒤 연

료 등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방제 효과와 목재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충남은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산업체와 목재집을 소비하는 발전업체가 관내와 인접 지역에 다수 위치해 산업화 방제 모델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현장토론회에서는 충남도의 재선충병 방제계획 발표와 함께 기계화 방제, 박스 차량과 그물망을 결합한 피해목 이동 방식, 대용량 훈증 등 산업화 방제 기술이 시연됐다.

박스와 그물망을 결합한 이동 방식은 원목을 그물망으로 감싸 재선충 매개충의 탈출을 막

고 원목 형태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도입됐다. 대용량 훈증은 방제 현장이나 인근 노지에 약 150㎡ 규모로 피해목을 적재해 훈증 약제를 투입하고 14일 이상 경과 후 방제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을 선도 모델로 산업화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목의 자원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업화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위기를 가치 있는 목재자원으로 전환하는 기회”라며 “충남을 시작으로 산업화 방제를 전국에 확산해 산림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박은식 산림청장(오른쪽)이 5일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왼쪽)과 태안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 상황관리 회의 주재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재선충병방제대응단의 활동상황과 지역별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방제 상황관리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림청 차장 주재로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 책임관과 산림병해충 담당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방제대응단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권역별 현장 활동 결과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방제 방향을 논의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만큼 어느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방제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제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소중한 소나무숲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방제 상황관리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생활권·도로·철도변 재선충병 위험목 관리 강화

생활권·도로·철도변 위험목 수시·상시 예찰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생활권과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사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예찰과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광역

시·도 산림부서의 산림재난대응단 1,768명, 숲가꾸기패트를 144명을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지역과 생활권 주변을 수시·상시 예찰하고 있다.

예찰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주변의 고사목 및 위험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 관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확인 및 제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로변 등 생활권 고사목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예로사항과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고사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제거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수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피해 확산을 막는 것과 함께 생활권과 주요 기반시설 주변 고사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 예찰과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안전한 고사목 제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년을 지나,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다.

축산환경관리원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

축산환경관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여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